



84년도 建築金賞에 「國際」사옥

서울시는 84년도 서울시건축상의 최고상인 금상을 국제그룹사옥에 주었다.

은상에는 비주거용 부문의 고운빌딩 (강남구 역삼동 618의 18), 동상에는 비주거용부문의 서울상공회의소회관 (중구남대문로 4가 45의 1)과 두손화랑 (종로구동숭동 1의 34), 이 주거용에서 성북동 주택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건물의 건축사 및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국제그룹사옥 (건축사 동해건축 시공자 국제상사)

◇은상(비주거용) = 고운빌딩(그룹가 건축도시연구소 삼익건설)

◇동상(비주거용) =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정림건축연구소 대림산업), 두손화랑 (김석철건축연구소 주식회사 세원개발)

(주거용) 성북동주택 (세화건축연구소)

4大門안駐車빌딩 建蔽率완화

서울시는 주차난해소를 위해 4대문안에 신축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건축법상 상한선인 70% 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완화대상은 4대문안의 준주거지 및 상업지역에 신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하나의 대지위에 모든 건축물이 주차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완화된 적용 건폐율은 70% 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방화지구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80% 까지, 그리고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 등은 90% 까지 허용된다.

현재 4대문내 일반건축물의 건폐

율은 건축물은 45% 이하로 한정돼 있고 재개발지구에서는 이 사업의 촉진을 위해 50% 까지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주차전용 건축물은 타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키로 했으며 건축허가전에 주차빌딩이 신축되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물탱크 설치등 설계변경시 申告단

건설부는 설계변경허가 또는 신고시에는 전체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보다 간소화시켜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했던 도면과 중복되는 것을 생략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설계변경 처리지침을 마련, 28일부터 적용 실시키로 했다.

이 지침은 또 계단탑, 물탱크, 1.8m 이하의 다락등 간단한 설계변경을 신고만 하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부 간막이벽, 내벽 변경등은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공사를 한후 이를 합리화 하기위한 사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위반부분을 시정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현재 3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허가사전승인제도도 간소화, 기본설계제도만 제출하여 건설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설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都心재개발 新築빌딩 都市가스사용 義務化

서울시는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되는 빌딩에 대해서는 냉·난방연료의 도시 가스 사용을 의무화 했다.

서울시는 또 도심재개발지역 외의 신축빌딩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냉·난방연료를 무공해 도시가스로 대체,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분석한 연료별 공해 배출

량을 보면 연건평 4천 5백평 규모의 16층 빌딩을 기준, 벙커C유를 사용하면 연간 5천 7백 7kg 이 나오나 도시가스는 53kg 에 불과하다.

大田에 100만坪규모 行政타운 建設

대전을 중심으로한 중부권개발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추진된다.

정부는 대전지역을 행정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 서울의 기능을 일부 이전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전시둔산 및 삼천동 일대 100여만평을 행정타운으로 개발하고 신탄진 유성, 대덕연구단지 진잠 등에 부도심권을 형성하는 한편 수도권정비실시계획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 관공서 등의 이전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전권개발 및 수도권정비와 함께 새국제공항이 들어서 는 청주와 청원일대를 포함하는 중부권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 그 세부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의뢰,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중앙부처중 과거처, 국가보훈처를 비롯, 외청가운데 조달청 전매청 특허청 철도청 공진청 등이 대전권으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60개 산하공사 및 정부투자기관 중 수도권에 있는 31개사가 대부분 이전대상에 포함돼 80년대 후반부터는 점진적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3월까지 수립될 수도권정비실시계획은 이미 확정발효중인 기본계획을 추진키 위해 정부내의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가 어떤 인구유발시설을 언제 어디로 이전시키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정비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